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859-2400 ~ 2410
팩스: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음 1월 27일) 제20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사상 최고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관광객 숫자 1109만7033명
지난해보다 44만8956명 ↑... 하루 평균 방문객 3만여명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숫자가 1109만 7033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카드 이용 데이터 등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통계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3만402명을 보이며 2년 연속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정부·전북도와 공동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업체와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지난 2016년 1064만 8077명과 비교하면 44만8956명, 지난 2015년 945만1854명과 비교하면 2년새 163만8487명 증가했다.

세부 데이터 분석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국내 관광객(1098만 5095명)의 20.79%인 227만 3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1만 5920명(19.26%) △20대 196만 3601명(17.88%) △50대 187만 8948명(17.1%)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방문 인구가 연간 약 361만 5858명으로 전체의 32.91%를 차지해 도내 시·군 관광객(359만1318명)보다 많았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적었던 경상권에서 온 관광객 수는 전체의 13.68%인 150만 2261명으로 1년 전(107만668명)보다 약 43만명 증가했다. 또 경상권 5개 시·도 관광객이 유인지역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두 늘어 전주한옥마을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방문 시기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 5월이 117만 4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102만1712명)과 10월(102만 3018명), 3월(98만72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속가능한 명품한옥마을 조성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홀대받고 사라진 문화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전주다움으로 많은 도시들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은 도시가 되면서 역사상 가장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해마다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며 "전주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가고 싶어 하고 시민들의 자량이 되는 한옥마을로 만들고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옥마을 관광객 통계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SKT 등 이동통



쳐져 있는 MB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쳐져 있다.

신과 로밍 외국인 데이터, 카드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에서 전주시 거주자가 일으킨 트래픽(1일 기준 시군데·지역별 중복자)을 제외한 것이다. /채규남 기자

농업 공익적 가치 개헌 자문안 반영

송하진 도지사 건의 "동학정신도 포함 노력"

전북도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송하진 지사가 그동안 적극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전북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월13일 구성돼 국민 의견수렴 및 분과위원회의 거쳐 자문안을 마련했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검토사항에 없었으나 전북도가 전북 지역 토론회에서 이를 적극 건의하고, 삼각농정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 반영을 촉구해왔다.

또,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반드시 '균형적 가치'가 반영될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하며 분권이 지역균형발

전과 함께 진행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자문안에는 균형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헌 자문안에는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정보 인권 등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적 평등 확대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하는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대법원장 권한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향후 추진일정을 고려해 이달(3월) 말 개헌안 발의 등의 추진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헌과 관련하여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균형적 가치, 동학농민혁명정신 등 3가지 전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균형적 가치(지역균형발전) 2가지가 포함돼 다행스럽다.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서해안권 지역자원 연계 수립 4면 -경찰 직접 수사 축소

문 대통령 "새만금 개발공사 속도 높여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 지역경제 큰 어려움... 새특법 개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3일 전북 지역경제 침체 관련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된다"며 "새만금개

발공사의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순찰 중 사망도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과 생활안전 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 등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재해보상법안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했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기능별로 재정비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인 체포 ▲주요인사 경호 및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 등의 업무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했으나, 여기에 ▲긴급신고 현장활동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등이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활동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화재 진압 등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밀폐 집 제거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중에 사망하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산림항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동승근무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순직유족급여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26~3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38%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3%를 지급한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

행안부, 지방분권 대비 진안 등 7곳 인사운영 컨설팅

행정안전부가 대구 남구, 울산 중구, 충남 서산시,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제주도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인사혁신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사혁신 컨설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행정안부가 학계와 민간 인사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9월까지 실시한다.

자문단은 채용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 조직문화까지 인사관리 분야별 운영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인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전년에 컨설팅을 통해 A도는 공무원 신규 임용자가 기본교육도 받지 않고 임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직 전에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B시 등 2곳에는 연가활용실적이 적고 주말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사례가 발견되어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뉴스

부안오복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복을 받으실 겁니다.
www.buanmasil.com

"어화세상벗님네야~ 복받으러마실가세~"

2018.5.5(토)~5.7(월)
Festival site_ Jeollabukdo Buangun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2018 6th BUAN MASIL FESTIVAL

*주관_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
*축제주최장_부안예술회관(전북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전북 부안군 일원(주행사장:부안읍)